

의료인 급여비 허위청구 최고 10개월 면허정지

치과의사, 의사 등 의료인이 급여비용을 허위로 청구할 시 최고 10개월의 면허정지 처분을 받는다.

또 의료기관의 개설자가 허위로 진료비를 청구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아 그 형이 확정될 시 허가취소 또는 폐쇄 처분을 받는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의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을 지난 3월 3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 규칙에 따르면 의료인이 진료급여비용을 허위로 청구할 때 허위로 청구한 비용에 따라 자격정지 처분을 받게 되며, 청구액수가 30만 원 미만이면 자격정지 1개월, 2천5백만원 이상 허위 청구하면 자격정지 10개월의 처분을 받는다.

지금까지는 진료비 부당 청구 적발 시 해당 병원, 의원만 건강보험 취급 기관 업무정지 처분을 받았다. 또 의사가 부당하게 많은 진료비를 환자에게 요구하다 적발되면 의사는

자격정지 1개월, 2차 위반시에는 자격정지 3개월의 처분을 받는다.

의사나 약사가 담합해 1차 적발되면 업무정지 1개월, 1차 처분된 뒤 2년 이내에 2차 위반시에는 업무정지 3개월, 2차 처분일로부터 2년 이내에 3번째로 위반하면 허가취소 또는 폐쇄 조치된다.

의사나 약사의 담합은 약사가 의사에게 처방전 알선 대가로 금전이나 물품, 향응 등 경제상의 이익을 주거나 의사가 처방전을 주면서 특정 약국에서 조제받도록 지시, 유도하는 행위 등이다.

복지부는 개정 사유로 의료인이 관련 서류를 위조, 변조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의료급여비용을 허위로 청구한 때에 적용하는 행정처분 기준을 허위로 청구한 금액에 따라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4·15총선 치의출신 김춘진 후보만 국회 입성 5선 도전 정균환 후보 제쳐 '화제'

지난 4월 15일 진행된 국회의원 선거에서 출마한 7명의 치과의사 후보 가운데 김춘진 후보만이 유일하게 당선됐다.

열린우리당 후보로 출마해 당선이 기대됐던 신동근 후보는 근소한 표 차이로 낙선했으며, 열린우리당 후보로 대구에서 출마했던 이재웅 후보도 끝내 지역주의 벽을 넘지 못했다. 또한 이번 총선에서 3선에 도전한 김영환 의원도 선전이 기대됐으나 26.1%의 지지율에 그쳐 열린우리당 후보에게 지역구를 내줬다.

지난 76년에 경희치대를 졸업하고 서울 영등포구에서 개원하다 전북 고창·부안군에서 열린우리당 후보로 출마해 당선된 김 당선자는 지역구가 지난해 원전센터 건립 반대로 반정부 정서가 강했던데다 정치초년생으로 5선에 도전하는 정균환 후보를 4124표 차이로 누르고 당선, 화제의 당선자로 주목받고 있다.

7명의 치과의사 후보 가운데 1명만의 당선은 당초 대통령 탄핵으로 열린우리당 지지도가 크게 상승해 최대 3명까지 당선이 기대되기도 했으나 선거날 막판까지 변수가 많아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

인천 서구·강화읍에서 열린우리당 후보로 출마한 신동근 후보는 지난번 보궐선거의 패배에 이어 한나라당 이경재 현 의원에게 4천690표 차이로 낙선했다 아쉬움을 주고 있다.

열린우리당 후보로 대구 중구·남구에서 출마한 이재웅 후보도 광성문 한나라당 후보보다 대외적 인지도나 인물평가도에서 앞섰으나 지역주의 벽을 넘지 못하고 33.6%의 지지율을 얻는데 그쳐 지난번 대구시장 출마에 이어 또한번의 좌절을 맞았다.

경기 안산시 상록구갑에서 3선에 도전했던 김영환 의원도 선거 막판 역전도 기대됐으나 민주당 지지하락을 만회하지 못하고 상당한 표차이로 시민운동가 출신인 장경수 열린우리당 후보에게 뒤졌다.

울산광역시 북구에서 한국기독교당 후보로 출마한 엄동옥 원장은 621표를 얻는데 그쳤으며, 필리핀 라숨노스웨스트 치대를 졸업하고 올해 신규 치과의사 면허를 취득, 전북 전주 덕진구에서 무소속으로 출마했던 황인택 씨도 1543표를 얻는 저조한 득표율을 보였다.

자민련 비례대표 8번을 배정받은 김용준 원장도 자민련 비례대표 1번을 배정받은 김종필 총재도 당선되지 못하는 낮은 지지로 출마에만 만족해야 했다.

치과의사 가족 가운데 동작구에서 개원하고 있는 김수정 원장의 남편인 서갑원 전 대통령 비서실 의전비서관도 전남 순천시에서 열린우리당 후보로 출마해 여유있게 당선됐다.

복지부 구강정책과 '자문치과의사제' 도입한다 전문성 향상·구강보건사업 역할 담당

보건소 및 보건지소 등 공공기관 구강보건사업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보건소 구강보건 사업 자문치과의사제도'가 도입될 예정이다.

복지부 구강정책과는 치과의사 및 공중보건의사가 배치되지 못한 공공기관의 경우, 저소득 노인의치보철사업, 치아홈메우기사업 등 구강보건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따름에 따라 이 같은 방안을 추진할 계획임을 밝혔다. 현재 전국적으로 보건소(248개)와 보건지소(1513개)등 공공기관은 총 1761개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되고 있으나 공공기관에서 활동 중인 치과의사는 1천25명(치과의사 50명, 공중보건의 975명)에 불과, 736곳의 공공기관에 치과의사가 없는 실정이다.

구강보건과는 자원봉사활동 중인 치과의사와 은퇴한 치과의사들을 자문치과의사로 흡수해 공중구강보건 사업에 직·

간접적으로 참여케 함으로써 구강보건 사업의 전문성을 높이고 원활한 공중구강보건사업 수행에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구강보건과는 사업 취지에 적합한 자문치과의사 인력 파악을 치협에 의뢰했으며 인력풀이 형성되면 이들을 해당자치단체에 자문치과의사로 추천할 계획이다.

자문치과의사들은 각 자치단체 보건소의 공중보건의사와 치과위생사 등 구강보건인력과 협력해 구강보건실 운영, 치아홈메우기, 노인의치보철, 치과치료 등에 참여하게 되며 소정의 활동비가 지급된다.

특히 구강보건과는 자문치과의사제도 도입이 원활히 진행될 경우 현재 치협에서 진행 중인 저소득층 노인에 대한 무료치과진료 사업이 성공적으로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연계할 계획이다.

한시적비급여 급여화 반대 결의문 채택 치정회 건보제도 개선 연구기금 3억여원 지원

한시적비급여의 급여화를 반대하는 결의문이 채택됐다.

또 치과의사윤리제정위원회가 신설돼 치과의사 윤리선언, 윤리강령 및 윤리지침을 정비, 치과의사의 윤리를 강화키로 했다. 아울러 한국치정회는 한시적비급여 급여화 대책 연구 등 건강보험제도 개선 연구기금으로 3억여원을 지원키로 했다.

치협은 지난 4월 17일 치협회관 대강당에서 제53차 정기대의원총회를 열고 ▲건강보험 기본정신에 입각한 급여의 우선 순위 부여 ▲구강질환 예방 차원의 공공의료 확충 ▲치석제거에 대한 급여기준 환원을 골자로 하는 지부장협의회 의 성명서를 대의원총회 결의문으로 채택키로 했다.

총회에서는 또 광중합형복합레진충진, 광중합형글래스아이노머시멘트충진은 대체가 가능하며 심미적인 재료이므로 보험급여화의 후순위에 해당되기 때문에 급여화에 반대하는 것을 강력하게 촉구하고, 보다 시급한 스케일링의 보험급여화를 요구했다.

치과의사윤리제정위원회와 관련 1971년 치협 대의원총회에서 제정한 7개항의 치과의사윤리를 강화해 ▲치과의사 윤리선언을 공포하고 ▲치과의사 윤리강령을 7~10개항 정도로 재정리하며 ▲치과의사의 사회적 역할과 의무를 세분화시킨 50~60개항의 치과의사 윤리지침을 완성, 혁신적인 치과의사 윤리를 선포키로 했다.

건강보험제도 개선 연구기금과 관련 치협에서는 당초 회원 1인당 3만원씩 모금하는 안을 상정했으나 현 회원들 정서상 각출하기보다 치정회 회비를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인상키로

하고 치정회서 특별기금 3억여원을 지원키로 결정됐다.

총회에서는 또 공직지부 개선을 위한 연구위원회를 신설, 의협이나 한의협에 없는 공직지부에 대해 새로운 위상정립과 발전적인 제도개선 방안을 강구키로 했다.

재단법인 한국구강보건의료연구원 재정 자립방안 마련과 관련 앞으로 1년동안은 구보연에 책정된 재정으로 운영하되 차기회의에 구보연의 자생력 방안을 마련해 제출토록 했다.

총회에서는 또 국제보건의료발전재단 분담금 5천만원을 적립금회계서 지출키로 승인했으며, 인정의 문제는 차기 5월에 열리는 지부장협의회서 결정키로 위임했다.

구강검진과 관련 건강검진 총 23개 항목 중 1개 항목인 치과 구강검진을 일반 의료검진과 치과구강검진으로 분리, 의무적으로 검진케 하고, 구강검진을 '구강암 조기 발견을 위한 구강검진'이라는 항목으로 전환, 검사비를 현실화할 것을 촉구하며, ▲치과의사 1인 이상 근무 치과의료기관도 출장 구강검진을 가능토록 하고 ▲구강검진 청구 방식을 디스켓 청구 뿐만 아니라 서면 청구도 가능토록 건의했다.

총회에서는 또 ▲치과보조인력 양성 대책의 건 ▲보건소 치과진료에 있어서 치료비의 덤핑행위에 대한 대책 ▲치과돌팔이 척결을 위한 협회 차원에서의 정책적 개선 방향 모색 ▲구강외과 수련의 지정병원 완화 등을 치협에 건의했다.

예산과 관련 지난해보다 6.5% 증가한 일반회계 예산(안) 36억8천9백만여원과 치의신보 특별회계 예산(안) 26억9천6백만여원을 관항목 변경해 사용토록 하고 일괄 승인했다.